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동독공공도서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c Libraries of East Germany in the Process of the Unification

노 문 자(Moon-ja Ro)*

초 록

신의주를 홍콩과 같은 경제특구로, 개성을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서방 자본주의를 점진적으로 수용할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북한의 변화는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김일성의 사망 후 갑자기 통일의 기운이 감돌았던 정치적 변화를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분위기는 그때와는 사뭇 다르고, 그동안 남북한간의 다양한 문화교류도 성사되었다.

분단국가에서 통일을 이룬 독일을 통해 그들이 도서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여 우리의 도서관 문제, 특히 공공도서관문제를 접근하는데 참고가 되고자 함이다.

동독은 그들이 자랑하는 공공도서관시스템이 통일과 함께 와해되는 위기를 맞았고, 서독의 공공도서관시스템으로 흡수되었다. 서로 다른 체제의 공공도서관시스템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궁극적인 이용자봉사를 최대화하는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We, Korean, still remember the moment that we got so excited due to the expectation of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ch turned to be failure when Kim, Il-Sung passed away in 1994. However, the recent close relationship between two Koreas has shown the remarkable improvement, and North Korea seems to be ready to expose itself to the western capitalism. The special economy zone in Sinewuiju is one of the examples showing the gradual change in N. Korea. This political change has made possible the cultural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which is similar to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learn from the previous experience happened during the German unification. We, then, need to realize how the Germany managed the problems aroused by unification. Especially, the matter in integrating two different public library systems in East and West Germany is treated as a major concern through the paper. The method Germany applied on integrating two different systems was to dissolve the one in East and let it be absorbed by the one in West even the public library system in East German was known as a well-organized network. Therefore, this paper shows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East German public library and harmonization of two different public library systems.

키워드: Public library, East Germany, Unification of library

* 송의여자대학 문헌정보학과교수(10835640@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02년 10월 28일

게재확정일자 2002년 11월 29일

1. 서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 문제는 학술도서관의 문제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통일을 맞은 독일의 공공도서관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다. 동독의 공공도서관시스템은 통일을 맞이하여 과거의 중앙행정시스템하에서 서독의 분권중심의 지방자치제시스템으로 변화해야만 했다. 동독은 14개 지역중심의 행정구역이 서독의 주(州)단위로 개편되면서 과거의 도서관 지도에도 큰 변화를 주었고, 이에 따라 많은 수의 공공도서관이 폐쇄되는 결과를 낳았다. 도서관의 폐쇄는 자연히 사서들을 실업자로 만들었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서독의 도서관계도 동독도서관계를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의 도서관계는 통일로 야기된 동독공공도서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법을 동원해 하루 빨리 동독공공도서관을 어느 정도 서독의 수준으로 끌어 올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력을 모았다. 행정지도의 변화에 따른 도서관시스템의 변화, 동독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과 혁신에 따른 재정지원, 동서독에서 도서관 문제를 다루는 비슷한 성격의 연구기관 통합, 사서들의 자격증 문제와 사서교육의 개혁 등 서로 다른 두 체제의 국가가 통합되면서 발생한 문제들은 수없이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서독 교육위원회 산하 동서독도서관전문가그룹이 결성됐다. 이들의 활동을 이어받은 도서관문제 국가아르바이트그룹은 도서관 문제를 분야별로 나누어 6개의 소아르바이트그룹을 결성했다. 이 중에서 특히 동독공공도서관 문제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그룹1은 동독공공도서관의 정책과 발전방안을 위해 수많은 권고안들을 내놓았다.

본 논문은 특히 통일 전후 동독공공도서관이 서독의 공공도서관시스템에 융합하는데 주 목적을 두어 이때 발간된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그리고 현재는 동독이란 국가가 없어졌지만 편의상 구별을 위해 과거의 명칭 동독을 그대로 사용했다.

2. 동독공공도서관의 위치와 체제

아주 작은 행정단위까지 전국적으로 잘 분포되어있는 공공도서관을 전문 도서관인이 관리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구 동독공공도서관의 특징이랄 수 있다. 통일이 되기 이전 1989년까지 전 국민의 23%는 13,545개의 공공도서관 시설을 이용했다(Dietle 1990). 주민 5000명 이상을 봉사하는 도서관은 전문직이 관리하며, 장서량은 각 주민 당 3권을 기준으로 했다. 이러한 통계는 동독을 “독서국가”로 칭하는데 손색이 없었다. 동독국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면은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잘 분포된 공공도서관을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했고, 또 도서관은 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자료의 제공에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일반적으로 서방세계의 공공도서관은 그들의 기본과제를 자유로운 의견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의 제공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지만 동독공공도서관은 그들의 기본업무, 즉 수서 업무에서 대출까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연계되어있었다(Klinger 1990). 동독공공도서관도 서독과 마찬가지로

교양, 오락, 지역사회와 주민의 지식개발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의 평생교육, 정보, 문화생활의 향유에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동독의 공공도서관은 명칭에 있어서 서독과 차이를 보인다. 동독의 공공도서관은 영어권의 Public Library와 같은 독일어의 Oeffentliche Bibliothek이 아니라 Staatliche Allgemeinbibliothek인 국립일반도서관이나 Allgemeinbildende Bucherei인 일반교양도서관이다. 또 1968년 도서관법 후에는 지역학술일반도서관(Wissenschaftliche Allgemeinbibliothek des Bezirke)도 등장했다. 이러한 명칭들은 내용적으로 보면 공공도서관이면서도 전인교육도서관의 성격이 짙다. 이러한 명칭은 레닌의 러시아혁명 이후 만인의 평등, 자본주의와의 투쟁, 문맹에 대한 처방으로서 과거 소련의 만인도서관(Massavaja biblioteka)에서 유래했으며(Marwinski 1990), 동독공공도서관은 이를 모델로 동독에서 40년 이상 발전시켜왔다. 본 논문에서는 국립일반도서관, 일반교양도서관, 지역학술일반도서관을 편의상 공공도서관과 동일시했다.

2.1 중앙행정체제하의 공공도서관 지도와 관리

서독의 철저한 지방자치행정체제와는 달리 동독은 통일이 되기까지 40년 이상 중앙집중행정국가였다. 이 중앙집중식 행정체제는 통일 후 서독처럼 지방자치행정체제로 바뀌면서 동독국가구조에 전면적 변화를 가져왔다. 동독의 도서관의 운영에서도 연방정부의 지침서가 4개 주(州)와 광역시의 행정관할구역으로 전달됨으로써 변화가 시작됐다. 이 변화는 중앙도서관에서부터 시, 군, 읍, 면 단위의 아주 소규모 단위의

도서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동독공공도서관의 최고 행정책임기관은 문화부였다. 이 문화부에는 도서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도서관자문위원회가 있었다. 서독의 공공도서관 재정은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세로 지원하지만 동독은 중앙정부 중심의 국고에서 지출했다. 모든 문화관련시설의 재정, 즉 지역의 회에서 시의회와 군의회, 읍, 면 단위까지의 재정 할당책임은 문화부에 있었다. 동시에 이 문화부는 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장서의 폐기처분, 각 도서관자료의 할당량까지도 정확하게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였다. 문화부 도서관 담당자들은 도서관 대출자료의 통계와 도서관 이용자 통계에까지도 관여했다(Marks 1987).

동독의 도서관은 관종에 따라 크게 공공도서관, 학술도서관, 노조도서관으로 대별된다. 이 세 도서관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구도 서로 다르다. 공공도서관은 문화부 산하 공공도서관전문연구소(ZIB: Zentralinstitut fuer Bibliothekswesen, 이하 ZIB)가, 학술도서관은 총무처 고등교육국의 학술도서관 전문연구센터(MZ: Methodisches Zentrum fuer Wissenschaftliche Bibliotheken, 이하 MZ)가, 노조도서관은 자유독일노조연맹의 도서관업무위원회에서 관장한다. ZIB는 동독공공도서관을 위한 중앙업무기관이다. 이 ZIB는 동독공공도서관의 분류표를 개발하고 도서관 이용자연구를 위한 책임기관이다. 또 ZIB는 동독공공도서관의 홍보는 물론 도서관 장서를 위한 홍보지침서를 발간하고 공공도서관의 교육과 계속교육, 재훈련을 책임지고 있다. 이 ZIB는 1970년부터는 공공도서관 발전과 기본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지도기관으로 됐다. 또한 ZIB 공공도서관을

위해 서평지인 문헌정보서비스지를 발간하여 공공도서관의 자료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 서평지는 국가 차원에서 자료선택을 위한 중앙자료선택지침서로서 자료구입을 결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자료선택기준과 도서출판시장의 제한은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동일작품의 복본을 다량으로 구입하는 단조로운 장서구성의 결과를 낳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ZIB는 도서관의 실무인 도서관의 조직, 사서교육과 사서계속교육의 방법론을 제시할 정도로 깊숙이 관여했다. ZIB의 이러한 활동범위는 공공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부내의 국가행정기관이 그들의 업무수행의 차원에서 당연한 과제로 봐야하지만 그들의 업무는 동독의 공공도서관을 특정 이데올로기로 유도하는 역할은 담당하고 있음은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동독의 도서관을 위한 또 다른 중앙기구로는 동독도서관협회를 들 수 있다. 동독도서관협회는 동독의 공공도서관과 학술도서관 대표하는 도서관단체협력체이다. 이 협회를 통해 공공도서관과 학술도서관은 협동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 협회는 동독 도서관계를 대표하고, 이 협회의 권고안과 기본방침인 “동독의 통합된 도서관시스템의 기본원칙”은 1968년 제정된 도서관법을 내용 면에서 세부적으로 보완하는 업무지침서이다. 그러므로 동독도서관협회는 동독도서관을 대표하는 국가중앙기관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받고있다.

2.2 동독도서관망 구조와 다양한 도서관유형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동독공공도서관은 명칭과 기능에 있어서 과거 소련의 영향을 받아

주민의 교육기능이 우선되는 국립일반도서관이 주를 이루고 있고, 1968년 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 5, 6, 7항에서는 새로운 도서관유형을 제시했다. 이 새로운 유형의 공공도서관은 지역학술일반도서관((WAB(B): Wissenschaftliche Allgemeinbibliothek des Bezirke, 이하 WAB(B))이다. 국립일반도서관에는 WAB(B), 시립, 군립도서관, 읍, 면도서관이 속했다. 이 WAB(B)는 동독을 14지역의 행정구역으로 나눈 결과 해당지역의 학술도서센터로서, 이 센터는 여기에 소속되어있는 도서관의 공동업무방침을 지도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도서관법에는 WAB(B)의 과제를 대학도서관이 떠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시립도서관이나 지역도서관이나 혹은 해당지역의 주립도서관이 WAB(B)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모든 14지역에 곧바로 WAB(B)를 설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역 내 기존의 시립도서관이나 지역도서관이 해당지역 도서관망의 지휘책임을 갖는다(Marks 1987).

시립도서관과 군립도서관은 소규모단위 도서관의 행정책임기관이다. 이러한 시립, 군립도서관의 과제는 지역도서관망에 연결된 모든 도서관을 위해 자료를 구입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업무를 중앙집중식으로 해결해준다.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지방 관구 중심으로 6내지 7개의 읍 면을 단위로 하는 지방중앙도서관을 설립했다. 이 지방중앙도서관은 상위의 도서관그룹의 조정과 지휘를 받는다.

동독의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망을 구축했으며, 이 도서관망은 노조도서관, 학교도서관, 요양소도서관, 병원도서관, 형무소도서관등 일반 시설도서관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동독주민은 동독 전체에 구축되어있는 공공도서관망을 통해 자유로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Marwinski 1990).

3. 정치적 상황에 따른 동독도서관의 변화

동독시민의 평화로운 시위 후 동독 국경이 개방되고 동독정부는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동독인의 삶은 새 출발의 분위기에 휩싸여있었고, 일상생활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참여의식에 부풀어 있었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동반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당연히 도서관계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여태까지의 수많은 도서관들은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또한 미래 도서관의 구도 역시 암흑상태에 처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인식에 따라 동독인들은 당연히 그들의 일자리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도서관들은, 몇몇 도서관들은 통일 후 몇 년 후 까지도, 고용창출대책(ABM)에 의해서만 도서관의 빈자리를 채웠다.

1990년 통일 즉시 실시된 동독인민회의 자유선거에서는 작어도 미래 시읍면 자치단체의 책임행정기관은 윤곽이 들어 났지만 지방자치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정치적 통합과정에서 동서독 화폐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동독은 서독에 흡수됨으로서 동서독이 통일협약을 1990년 10월 3일에 끝냈다. 이 헌법적인 통일이 끝난 후에야 도서관계의 발전에 대한 확실한 방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래 새로운 동독도서관의 구상에는 서독도서관을 기준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통일 후 동독도서관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동독도서관의 장서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Buhrfeind 1990). 그리하여 동독도서관 장서의 3분의 1정도는 선별하여 제거하기로 했다. 이 폐기된 장서의 공백을 서방세계의 출판물로 채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서독에서 동독도서관의 장서를 보충하기 위해 자료를 구입하는 업무를 관장할 조직과 책임기구가 정해지지 않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독도서관 사서들의 서독도서관에 관한 정보요구는 대단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력으로 도서관 장서를 보충할 재원을 충당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동독의 공공도서관 설립을 위해 9000만 마르크(540억원)을 연방정부에 요청했으나 화폐통합에 따라 이 예산은 즉시 조달되지 않았다(BR(D)DR 1990). 화폐통합에 따른 도서관의 예산집행에도 혼란을 가져왔다. 화폐통합에 따라 도서관마다 예산집행 방법이 각각 달랐다. Erfurt도서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전방법을 고시했다. 서독의 화폐도입 전 1990년 6월 30일 까지 그 해의 연간예산을 집행하도록 했고, 서방세계의 자료는 그 후에 구입하도록 했다. 서방에 주문했던 자료는 화폐통합 후에 1:1로 계산했다. 재정경제부로부터의 시세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구입 예산과 그 규모에 대한 현실적인 지시사항은 없는 상태였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재원이 있으면 자료를 직매하는 방법으로 도서를 구입하였다(Jahresbericht 1990).

3.1 동독의 새로운 행정체제와 공공도서관의 구조변화

통일 전까지 동독에서 중앙집중식 행정체제

로 관리, 지도되어왔던 문화시설은 통일 후에 주(州)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체제 중심으로 재정이 운영된다고 통일조약 제 35항에 명시되어있다(Einigungsvertrag 1990). 도서관으로 볼 때 이 조항은 과거 동독이 14 지역(Bezirk)로 나뉘어 중앙으로부터 관리됐던데 반해 통일 후에는 동독이 4개의 새로운 주(州)(Neue Bundesland)로 분할되어 서독의 10개 주에 추가 편입됨으로서 도서관에는 법적, 행정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1968년 동독도서관법은 효력을 상실했고 동독문화부는 1990년 해체 과정에 들어갔다. 통일 후 연방정부 산하 각 주의 자치권은 아직까지 도서관계까지 그들의 권한이 미치지 않고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서독에 비해 매우 다른 구조로 운영되던 동독공공도서관 시스템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떠한 모델도 없었기 때문에 동독공공도서관은 공황상태에 빠져있었다. 공공도서관의 재원 할당이 정확한 연구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행되었고, 공공도서관의 수가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도서관인들은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다(Burhfein 1990).

동독공공도서관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던 ZIB는 통일 후 초창기에는 동독공공도서관의 변화를 과거처럼 중앙행정체제 하에서처럼 주도하려는, 즉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시스템을 고집하려했다. 흡수통일이 구체화되기 이전까지 동독이라는 국가가 과거처럼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동독공공도서관 시스템을 서독의 시스템에 맞추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이 ZIB는 동독공공도서관 구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입장을 “동독의 행정구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조정”이라는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주 중심의 행정구조 하에서 공공도서관의

관의 결속과 도서관망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안에서는 다양한 자료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어야 하고, 1968년 도서관법에 의한 동독공공도서관의 시스템이 하양식 계급조직상의 단계적 시스템을 통해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고 지도하는 예전의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헌법적 통일조약 후에는 과거 동독지역에도 연방주의 원칙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자 위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WAB(B)는 각 주의 자치권이 철저히 보장되어있는 연방제도체제 하에서는 관철시킬 수 없었다. 과거 동독의 WAB(B)가 담당했던 과제들은 서독의 개념에서는 각 주의 주립도서관이나 도서관전문센터에서 해결하도록 되어있었다. ZIB에서 제시한 추가 요구사항들인 공공도서관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주 정부, 연방정부의 재정 의무와 연방 차원의 법적 규정, 주 정부와 공공도서관의 협력 등은 실현 불가능한 사항들이라고 Elke Siegl은 간주했다. “공공도서관의 유지를 위한 걱정과 불안은 타당하다. 그러나 재정상 지원할 수 없는 기준(인력, 장서)으로 도서관의 중앙집중식 시스템을 주장한 것은 도서관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도서관의 폐쇄를 야기 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Siegl 1990). ZIB가 과거 동독공공도서관 시스템을 고수하려는 노력은 도서관법의 입법과정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는 통일 후 독일의 공공도서관시스템을 과거 동독공공도서관시스템을 모델로 삼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동서독의 힘 겨루기 양상으로까지 비춰지기도 했다. 동독 측의 이러한 주장은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서독의 도서관계는 전혀 변화하지 않고 동독의 도서관계만이 서독의 도서관 시스템에 적응해야한다는 비판의 표

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동독공공도서관의 구조개혁의 결과는 1992년의 도서관통계에서 읽을 수 있다. 1989년 개방의 물결이 시작하여 통일 후 1992년 사이 지방중앙도서관과 분관도서관은 6256곳에서 2946곳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Huebner 1993). 물론 이 숫자에는 군 행정 단위에서 연합형태로 유지되었던 소규모 도서관들이 대부분 포함되었다. 이렇게 폐쇄된 도서관의 주민들은 어느 정도는 자동차문고로 봉사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권익을 대변하는 전문센터가 없는 데서는 도서관의 폐쇄가 잇달았다. 또 도서관의 통계에서는 과거 동독의 중앙 기능이 축소되어 가는 경향을 보였고, 시읍면 도서관의 업무도 과거처럼 명령하달 식에서 탈피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1991년과 1992년에는 3분의 1의 지방중앙도서관이 폐관되었다. 시립도서관과 군립도서관의 숫자는 감소되었지만 군 행정 단위에서 소규모 도서관은 여전히 군립도서관의 지도와 조정을 받고있었다(Huebner 1993).

동독에서 WAB(B)의 구조변화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WAB(B)는 시립도서관 수준으로 정착되기도 하고, 새로 설립될 주 단위의 주립도서관의 과제를 위임받기도 했다. 그 예로 Potsdam의 WAB(B)는 포츠담시립주립도서관으로 개칭되었고, 도서관의 직원 역시 큰 변동이 없었다(Kraft 1993).

동독공공도서관을 중앙에서 지휘하던 시스템이 해체되고 그 기능은 각 주 단위나 지역 단위의 도서관전문센터가 맡게 됐다. 이 센터의 긴급과제는 자치단체의 군 행정구역내의 도서관망

을 새로 구축하는 권고안의 작성이었다. 이러한 업무는 당연히 주정부가 주도하는 군의 상위 행정구역개혁에 따른 결과였다. 이 개혁은 특히 과거 군 행정구역내에서 중앙조정기능을 맡았던 도서관의 미래를 불안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 1992년 말경에야 동독의 새로운 주에서는 군 단위 분할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발표됐다. 군 단위가 과거보다 더 확장된 관계로 군립도서관의 수도 당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권한도 재조정되어야 했다. 행정단위의 개혁과 동시에 지방자치제의 관건인 재정자립에 관한 문제도 표면화 됐다. 읍 면 단위의 관할행정에도 구조적 변화를 단행했다. 주민 5000명을 봉사하는 다수의 소규모 읍 면들은 그들의 행정을 관할하는 관청에 소속되어야 했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개혁과 그에 따른 도서관의 재정책임기관의 변화는 과거 동독의 상하관계인 계층적 도서관시스템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줬다.

과거 공공도서관을 조정하는 중앙센터의 기능은 도서관전문센터가 수행하기로 되었다. 이 전문센터의 설립과 예산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존폐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었다. Mecklenburg-Porpommern의 국립도서관전문센터는 직원의 해고로 업무가 마비상태에 있었으나 1993년부터 도서관협회의 노력으로 다시 업무를 재개해 1994년부터는 지속적인 전문인력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Thueringen주의 주립전문센터 역시 1994년부터 주 정부로부터 예산이 확정되어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전문센터의 책임자의 보고서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실은 각 주나 지역의 도서관의 기능을 조절하고 관할하는 도서관전문센터가 얼마나 불안정한 위치에서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Klut 1993).

3.2 동독주민의 변화된 정보요구

국경 개방 후 동독주민들에게는 도서와 학술 잡지의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 동독도서관에는 그들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한 주문이 폭주하여 도서관은 일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개방 물결이 시작한 1989년부터 통일 후 1991년 사이 동독의 도서관은 평균 21%이상 자료대출의 감소를 보였다(Was 1992). 이는 많은 동독주민들이 통일에 즈음하여 동독공공도서관보다 국경 근처의 서독도서관을 이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분단된 베를린시의 도서관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서베를린 사서의 경험에 의하면 동독의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은 최신 기술관련서적, 컴퓨터서적, 언어, 동독에서 출판이 허용되지 않았던 작가의 작품, 과거 베스트셀러, 사회과학과 철학관련 주제의 서적, 서독 각 도시의 지도, 에로티즘 서적, 비교도(秘敎徒)관련 서적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자료들은 동독 공공도서관에서는 접근이 어려웠다(Hoepfner 1990). 동독 이용자의 자료 요구는 서독과 차이를 보인다. 수많은 동독주민은 그들 자신의 역사에 대한 고찰에 관심을 가져 정치적 문헌과 동독에서 금서였던 자료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새로운 국가, 통일된 국가의 법과 책임에 관한 토론을 다루는 최신 법률관련 문헌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리하여 도서관은 통일을 통해 야기된 문제를 다루는 관련자료를 준비해야했다. 동독주민은 또 마약문제나 에이즈관련 자료에도 큰 관심

을 보였다. 이 외에도 동독주민은 통일을 계기로 증가하는 실업과 이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상담관련 자료의 요구도 높았다(Mahrt-Thomsen 1990).

통일 후 동독공공도서관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자료는 “민주주의의 배움”이라는 표제로 압축할 수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투표에 대한 경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동독공공도서관은 민주주의에 관한 자료, 인민의 회선거의 선거프로그램, 시민운동에 대한 전단지, 정당프로그램, 그들에게는 생소한 지방자치에 관한 자료 등을 준비해야 했다(Huebner 1990). 이러한 사회, 정치적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한 대표적인 도서관으로는 Erfurt의 정보상점(Infoladen)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법률, 보험, 세금, 소비자 문제, 산업생산성 평가, 생상품 가격의 비교에 관한 정보를 담고있는 부로슈어, 일상생활 전 분야에서 언제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역주소록, 상담관련자료 등등 미국의 “Community information service”의 기능을 담당했다.

의도적이면서도 필수 불가결한 도서관장서의 변화는 Erfurt도서관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 새로 구입한 자료는 주로 역사, 철학, 종교, 경제와 사회복지, 사회환경, 여행관련 문헌들이다. CD-ROM과 비디오자료에 대한 수요도 꾸준했다. 문학작품에서 동독이용자의 경향은 통속문학이었다. 문학작품의 통계에서도 여러가지 경향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문학작품의 대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이용자의 반응은 환경변화에 따른 “독서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감의 결여”라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대중문학의 대출에는 동독작가의 작품보다는 국

제적인 베스트셀러의 요구가 높았다. 동독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자료요구가 변화된 요인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기업들은 회사를 설립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도전, 기술 분야에 필요한 교육과 계속교육, 재훈련의 수요에서 찾을 수 있다(Goehler 1990).

동독주민들의 자료요구는 출판물의 유형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최신오디오, 비디오자료, 전문잡지, 서방세계의 일간지와 화려한 일러스트에 대한 꾸준한 수요는 1993년 도서관 장서조사에서도 나타났다(Marwinski 1990).

통일 후 3년 내에 동독도서관 전 장서의 약 35%의 교체는 도서관 이용자의 증가로 나타났다. 서독에서는 주민 당 대출이 4.56권인 반면 동독주민은 5.24권이었다. 이러한 통계는 다시 활력을 보이는 공공도서관이 주민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은 입증했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도서관의 장서내용에서도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보요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통일 후 틈새 없이 잘 조직된 동독의 공공도서관의 효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입증했다(Guennel 1993).

4. 동독공공도서관 촉진정책

통일된 환경에서 동독공공도서관을 발전시키는 데는 도서관 각종 단체의 활동이 매우 중요했다. 이렇게 동독도서관이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에 처했을 때 서독도서관계는 통일과 함께 재정긴축상태에 돌입해 서독의 각종 도서관 단체도 사실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서독도서관계가 동독도서관을 도와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서독도서관이 동독도서관을 돕는 첫 발걸음은 독일도서관연맹(BDB: Bundervereinigung Deutscher Bibliotheksverband, 이하 BDB)의 발의로 이루어진 동독과 서독도서관끼리의 교류와 접촉을 성사시키고, 현실적으로는 서독의 신문사에 의뢰하여 동독공공도서관에 무료로 신문을 제공하도록 독려하느 일 이었다. 서독도서관계가 동독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은 연방정부, 각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그 외 문화관련 책임기관에 보낸 지원호소, 촉구안, 서한 등이었다. 그 결과 BDB는 1990년 모든 서독시민에게 “동독공공도서관을 위한 마르크운동”을 벌였지만 성사시키지는 못했다(Mittler 1990). 동독공공도서관을 위한 노력은 다음에 언급한 각종 위원회와 도서관 관련단체 이외에도 공공도서관의 전문회의(Fachkonferenz der Staatlichen Buechereistellen)와 지방자치체의 문화정책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독일시의회(Deutsche Staedtetag)도 있었다(Deutsche 1990).

4.1 도서관전문위원회의 탄생과 독일도서관연맹

4.1.1 국가아르바이트그룹

헌법적 통일 반년 전 1990년 2월 서독과 동독의 교육부와 주정부 교육부장관회의에서는 동서독교육위원회(Deutsche-Deutsche Bildungskommission)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의 과제는 동독과 서독의 서로 다른 교육시스템을 통합시키고, 이를 위해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를 만들고, 이 이정표에 필요한 전제조건들

을 설정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교육위원회는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도서관 문제를 다루는 도서관분과위원회에서는 1990년 5월 동서독도서관전문가그룹(Deutsche-Deutsche Expertengruppe Bibliothekswesen)을 조직했다(Dankert 1990). 이 도서관전문가그룹의 첫 회의는 1990년 6월 서베를린의 독일도서관연구소(DBI: Deutsche Bibliotheksinstitut, 이하 DBI)에서 소집했다. 이 도서관전문가그룹 회원은 연방교육부장관의 대표, 서독의 주정부와 새로 탄생될 동독의 주정부 장관, 동서독의 도서관실무 관련자 등 29명이었다. 이 중 동독의 대표는 11명이었다. 회의는 연방교육부의 대표를 회장으로, 회장직은 동서독이 순번대로 교대했다. DBI는 도서관전문가그룹을 위한 사무국 역할을 했다. 전문가그룹의 첫 과제는 통일 후 도서관계가 필요로 하는 긴급조치를 위한 권고안을 작성하고, 통일 후 발생할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작업이었다. 도서관전문가그룹을 통해 만들어진 제안은 입법권을 가진 행정기관과 기획위원회에 제시한다.

먼저 도서관전문가그룹의 회의는 “새로 편입된 동독도서관을 위한 권고안”을 1990년 9월에 발표했다. 이 권고안에서 다룬 내용을 보면

- 동독도서관의 법적 보장
- 동독도서관을 위한 단기적 보조프로그램과 장기적 도서관 구조조정
- 기본장서개발
- 도서관 예산모델과 도서관 기준, 표준에 관한 발전안
- 도서관 건축과 보수
- 도서관 전문인력의 교육

- 공공도서관 설립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발전안

- 지역, 전국적 도서관서비스 협력

1990년 9월 26일 두 체제의 국가가 헌법적 통일에 서명하기 며칠 전 동서독교육위원회는 그들의 업무를 끝냈다. 이 교육위원회는 그 후 도서관전문가그룹의 제안에 따라 도서관계를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국가 아르바이트그룹(Bund-Laender Arbeitsgruppe Bibliothekswesen, 이하 국가 AG)라는 명칭으로 통일 후 어느 정도 도서관계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기로 하여 1992년 11월까지 연장했다(Bund 1993).

동독도서관계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도서관전문가그룹은 그들의 업무를 단기, 중기, 장기프로그램으로 세분화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동독도서관 문제를 아래와 같은 6개 분야의 소아르바이트그룹(Arbeitsgruppe, 이하 AG)으로 나누었다(Usemann-Keller 1990).

AG1: 공공도서관 문제

AG2: 도서관 인사문제/사서교육, 계속교육, 재교육

AG3: 학술도서관의 자료제공

AG4: 지역, 전국적 정보봉사과 이에 따른 관령 중앙기구/ 상호대차

AG5: 도서관시설의 현대화와 정보기술분야

AG6: 도서관의 구조와 법적 지위

도서관전문가그룹이 정한 6개 분야 AG 중에서 첫 번째 AG인 AG1은 명칭 그대로 통일을 계기로 발생하는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장이었다. 공공도서관 문제에는 공공도서관을 위한 긴급 조

치안과 이에 필요한 비용의 측정, 도서관 직원의 구조조정, 장서수립계획, 새로 탄생될 도서관전문센터의 구조 등과 같은 문제들이 강조됐다. AG1은 각 주 정부의 교육부대표, BDB, 독일도서관협회(DBV:Deutsche Bibliotheksverband, 이하 DBV), 공공도서관사서협회(VBB: Vereins der Bibliothekare an Oeffentlivhe Bibliotheken, 이하 VBB), ZIB대표와 공공도서관사서들로 구성됐다. AG1의 위원장 Dankert는 1990년 7월 첫 회의를 가졌다. 여기서는 공공도서관의 재정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AG1의 회원들은 공공도서관의 재정을 위해서는 도서관이 전국민을 봉사하는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을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홍보활동을 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AG1은 먼저 공공도서관 사서, 정치적 행정적 의사 결정권을 가진 주무 해당 관청과 재정책임자에게 호소하고 홍보했다(Bund 1993). 홍보활동의 자료로는 서독도서관의 지침서였던 “도서관계획 73”을 동독공공도서관 중에서 지도적 역할 담당하는 도서관과 도서관 재정 책임기관에 배포했다. 이 지침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배포하는 업무는 DBI가 연방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처리했다. 이를 계기로 서독도서관계에서도 “도서관계획 73”이 동독도서관의 기준을 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새로운 도서관 지침서인 “도서관93”의 발간을 계획했다.

AG1과 DBI가 공동으로 발간한 “공공도서관 업무지침: 도서관 직무와 분석”과 “70년대 이후 도서관 구상”도 동독공공도서관 사서를 위한 자료였지만 이 자료들은 동시에 통일된 독일의 미래 공공도서관 정책과 방향을 제시한 자료로서 간주되었다.

AG1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 보낸 호소문이 도서관 발전 촉구프로그램에서 공공도서관에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했다. 그 예로 동독의 새로운 주에서는 AG1의 제안대로 연방정부가 자동차이동문고의 설립을 100%지원했다. 자동차문고는 통일을 전후로 폐쇄되는 공공도서관이 증가함에 따라 도서관 소외지역의 주민들을 봉사하기 위해 고안된 임시 도서관이었다. AG1은 이에 덧붙여 잠재적인 재정책임 기관에도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자동차문고의 직원교육을 위한 계속교육과정을 활성화시켰다(Bund 1993).

AG1의 또 다른 활동분야는 통일 후 변화된 행정구역 관할에 따른 도서관의 구조조정이었다. 이 과제를 위해서 AG1은 두 종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1. 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유지와 시설에 관한 권고안
2. 동독지역의 공공도서관 촉진에 관한 권고안

첫 번째 권고안은 공공도서관장서의 규모, 장서구입예산, 공간규모, 건축비용, 도서관 인력과 관리에 관한 표준을 제시했다. 이 안에서는 주민 5000명부터는 도서관 설립을 확정하고, 읍,면 행정단위에서는 주민 3000명 이상에서 도서관 설립을 의무화했다. 중앙행정구역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잘 조직되었었고 또 양적으로도 우세했던 동독공공도서관인들에게 이 권고안은 처음에는 발전안이나 촉진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미흡했다. 그러나 통일을 전후로 폐관되는 도서관이 생기고, 도서관들이 재정위기에 처하고, 기존 장서의 40%까지도 폐기처분되고, 직원들이 해고되는

상황에서 이 표준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Bund 1993).

두 번째 권고안은 동독공공도서관이 과거 중앙집중식 행정체제에서 상하관계에 있었던 도서관시스템을 지방자치체제로의 횡적 시스템으로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즉 동독의 도서관을 서독과 같이 주 정부를 통해 촉진, 발전시키는데 주력했다. 각 주의 공공도서관의 지원은 전문적인 협의와 재정적인 지출에 따라 결정됐으며, 이러한 지출 또한 무조건적이라기보다는 도서관 관할 관청 자체의 실적을 전제로 행해지도록 명시했다. AG1은 국가차원에서 동독공공도서관을 촉진시키기 위해 해마다 국민당 1마르크를 요청했다. 이 재원은 각 주의 도서관전문센터를 통해 배분토록 했고, AG1은 이러한 업무를 주도할 각 주의 도서관전문센터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인건비와 업무내용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Empfehlungen 1991). 이 안은 국가AG의 통과를 거쳐 동독의 주정부교육부, 전국 시의회 의원,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주무관청, 공공도서관에 보내졌다.

서독의 행정조직이 동독의 행정업무를 거의 위임받은 1992년 AG1은 공공도서관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세 번째 “동독 군 소속의 읍면소재지와 그 외 보조도서관의 지속과 확장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Bund 1993). 이 안은 전국 시의회에서 시의원, 동서독 주 정부 장관, 군 의회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AG1의 또 다른 활동인 도서관 인력문제와 장서구성은 해당 관련 장에서 다룬다.

국가 AG가 공공도서관의 문제에 있어서 배놓을 수 없었던 문제는 도서관법의 준비작업이었다. 통일 후 중앙행정체제에서 주 단위의 지

방자치행정체제로 바뀌면서 이에 합당한 각 주의 도서관법 제정과 도서관법에서 동독공공도서관의 위치였다.

국가AG의 업적에 대해 Dietz는 매우 긍정적 평가를 했다(Dietz 1992). 특히 각 주를 초월하여 작성한 권고안은 동독공공도서관을 위한 방안들이었지만 결국은 통일 독일의 공공도서관 발전에 한 몫을 했고, 이를 계기로 주정부 교육부장관회의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위한 AG처럼 학술도서관을 위한 AG를 결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AG1의 해체 후 공공도서관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었다. AG1의 최종보고서에는 확정된 규격과 표준의 제정, 공공도서관과 학술도서관의 네트워크, 사회 문화적으로 향상된 도서관서비스 제공과 같은 시급한 문제를 제시했다(Bund 1993). 그리하여 AG1은 공공도서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도록 문화부 위원회에 공공도서관아르바이트그룹을 신설하도록 주 정부 문화부장관회의회의에 건의했다(Guennel 1992).

4.1.2 독일도서관연맹의 공공도서관플랫폼

AG1이 연방정부와 주 정부 차원에서 동독공공도서관 문제를 다루었다면 공공도서관플랫폼(Kuhlmann 1991-1994)은 순수 도서관전문가 입장에서 동독공공도서관 현안을 접근했다. 이 플랫폼은 법적 통일을 거의 한달 앞둔 1990년 8월 29일 BDB 부대변인 Dankert의 초청으로 “독일의 공공도서관에 관한 토론과 계획”의 장을 마련한데서 출발했다. 플랫폼의 목적은 동독과 서독의 통일 과정에서 동독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대외적으로 공공도서관을 홍보하는데 있었다. 이

목적을 위해 플랫폼은 국가AG를 적극 지원했다. 이 플랫폼의 회의에서는 플랫폼과 AG1의 업무를 서로 교환하고, 업무의 중복을 피하도록 그들 활동 영역을 조정했다.

플랫폼의 두 번째 회의는 1990년 11월 1일에 소집했다. 여기서는 “동독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동독 문화부장관에게 보낸 촉구안에 관한 심의를 했다. 첫 회의에서 주장한 공공도서관 발전안에서는 재정지원을 촉구했으며, 특히 사서의 교육, 재교육, 계속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보충안도 제시했다. 여기서 결정한 사항들은 연방정부의 해당 부서에 보내졌다.

세 번째 회의는 1991년 1월 “새로 편입된 동독 주정부의 시 읍 면에서의 도서관 유지와 시설에 관한 권고안”을 주제로 삼았다. 이 권고안은 AG1에 상정됐으며, 여기서는 앞으로 더 있을 예정인 공공도서관의 폐쇄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여기서 의결된 발전안은 연방정부 여성청소년부장관에게도 보냄으로써 청소년도서관 업무와도 연계시켰다.

네 번째 회의는 공공도서관사서협의회 연례세미나를 계기로 모였다. 여기서는 BDB의 아르바이트그룹이 참여하여 서독도서관의 기준과 지침서였던 “도서관계획 73”의 개정작업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 DBV는 통일된 도서관계의 발전을 위해 각 주 단위의 도서관협회가 의기투합하도록 촉구했다.

1991년 9월 30일에 열린 다섯 번째 회의에서는 도서관의 구조변화에서 파생된 다양한 문제점, 도서관전문센터의 설립, 도서관 재정책임기관의 변동 이외에도 도서관 인력문제를 주제로 다루었다. 여기서는 동서독 사서직급의 등가

원칙(等價原則)에 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동독공공도서관에서 20 내지 25%의 일자리가 감소한 상황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여섯 번째 회의는 1992년 3월 군 읍 면 도서관의 개혁과 1993년 연방정부로부터 거의 중단될 재정지원이 주제였다. 이러한 예산중단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군립도서관은 군 읍 면 단위의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또 이에 필요한 홍보전략을 짜내고, 사서들 또한 사명 의식을 고취하도록 촉구했다. 또 이 회의에서는 AG1이 발표한 “동독 군소속의 읍 면 소재지와 그 외 보조도서관의 지속과 확장을 위한 권고안”도 토론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 권고안이 국가AG에서 의결토록 촉구했다. 또 도서관 인력문제, 개정된 “도서관93”의 내용분석, 도서관플랫폼의 지속 등에 관한 사항들이 논의됐다. 국가AG의 해체 후 BDB는 플랫폼의 활동을 적극에 지지를 하여 그 회원 수를 더 늘렸다. 여기에는 각 주정부 교육부장관협의회 대표와 지방자치 행정관청의 대표들도 추가로 회원이 되었다.

1992년 7월 일곱 번째 회의에서는 주 단위로 설립될 도서관전문센터의 규모, 예산, 직원 수에 관해 논의했고, 12월의 여덟 번째 회의에서는 동독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후 공공도서관 인력이 현저하게 감소된 긴급상황에 관한 대책이었다. 이 시기에 AG1의 마지막 보고서가 발표되고, 그들의 업무를 이 플랫폼에서 지속하기로 의결을 보았다. 이때부터 플랫폼은 그들의 과제를 동독공공도서관의 발전이라는 시각에서가 아니라 통일된 독일공공도서관의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거시적으로 다루었다.

1993년 3월과 6월의 회의에서는 또 다시 공

공도서관의 재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 주정부의 책임을 강력하게 촉구했고, 정부의 긴축정책의 영향과 그 파급에 관한 도서관의 현안에 관해 토의했다. 또 각 주 단위의 도서관협회는 주 정부에 공공도서관의 촉진방안을 지속토록 청원서를 제출했다.

열한 번째의 공공도서관 재정에 관한 회의에서는 성공적인 결과가 보고됐다. 그 당시 동독의 문화시설 보존과 하부구조 축진을 위해 연방 정부는 2억5천만 마르크(약 1500억원)를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BDB의 주 업무는 이 전체 지원금에서 동독공공도서관에 할당되는 분담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

1994년 3월 마지막 회의에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에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이란 주제로 행사를 개최하는 준비과정이었다. 이 행사는 새로 구성된 동독의 주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하부의 행정관료를 주 대상으로 거행됐으나 1993년부터 공공도서관 문제를 동독에 국한시키지 않고 통일 독일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점차 동독공공도서관의 하부구조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문제점은 동서독을 막론하고 거의 동등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했다

4.2 동서독의 도서관 연구기관의 통합과 그들의 활동

동서독 도서관 관련 단체와 기구의 통합은 점진적으로 진행됐지만 시작은 이미 통일 전부터였다. 1990년 4월 “베를린 비망록”(Berliner 1990)에서 동서독 도서관 단체들은 그들의 미래 협력에 대해 협의서를 채택했다. 이 합의에

는 동독도서관의 구체방안, 세미나개최, 도서관 업무경험교환, 도서관간의 자매결연 등을 도서관 발전안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발전안은 DBI, ZID, MZ의 지원으로 구체화되었다.

4.2.1 독일도서관연구소(DBI), 공공도서관전문연구소(ZID), 학술도서관전문연구센터(MZ)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기 전 1989년 DBI와 ZID는 교류를 시작했다. 이 두 기관의 관장과 실무자들은 처음엔 단순한 대화로 교류를 시작했고, 그 해 연말에는 두 기관의 협력을 계획하는데 까지 발전했고, 1990년 봄 MZ도 여기에 합류했다. 이 세 기관의 현안은 동독공공도서관을 위한 서독연방교육부와 각 주 정부의 긴급지원의 조정이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업무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서독의 DBI는 동독의 현지 상황에 대해 ZID와 MZ로부터 조언을 받았다. 이 세 기관의 협력은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냈지만 서독의 DBI가 동독의 두 기관보다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세 기관의 통합에 관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독이 서독으로의 흡수통일이 확실해지자 이 문제는 재정적인 면에서 거론될 수밖에 없었다. 한 국가에 비슷한 성격의 세 연구기관의 존립은 연방정부에서는 허용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세 기관의 합병 또는 DBI의 확장이라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세 기관의 합병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 어려웠다. 합병의 경우 DBI법의 개정이 불가피했고, 세 기관의 연구 영역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새로운 협상이 필요했고, 또 합병기관에서 나머지 두 기관의 직원들을 모두 책임져야했다. ZIB

와 MZ의 1991년 과도기 예산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DBI위원회와 도서관전문가그룹은 ZIB와 DBI의 명칭을 조합한 공공도서관연구소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ZIB와 MZ의 기능을 DBI에 이양함으로써 DBI의 확장이라는 결정을 보았다(Beyersdorff 1992). 그리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1991년 DBI의 예산안을 책정한 결과 50명의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으며, 그 중 44명은 ZIB와 MZ의 직원 중에서, 나머지는 공채했다.

DBI는 그들의 업무 확장을 통해 과거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수행이 어려웠던 연구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했다. 동독도서관을 위한 상담서비스는 자연히 그들의 확장된 업무의 우선순위를 차지했고, 특히 동독공공도서관을 위한 다음의 특수업무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원이 보충됐다: 도서관 건물과 시설, 장서관리정책, 수서, 도서관 자동화, 각 주의 도서관전문센터의 업무, 공공도서관 분류표의 보완, 동서독 상호대차규정, 이동도서관 신설과 조직, 서지사업(서독의 정기 간행물 DB에 이미 동독의 소장사항을 입력), 연구기관 간행물 출판(Erweiterte 1992).

ZIB가 DBI로 흡수 합병되기까지의 그들의 업적도 상당하다. ZIB 관장 Stroscher는 먼저 DBI관장 Beyersdorf와 두 기관의 협력파트너 협약을 시작으로 서독의 도서관업무상담, 전시회, 단기실습에 동독전문가 참여 또 공동으로 동서독 도서관주소록, 전국도서관부호표, 독일도서관통계, 독서촉진프로그램편람을 발간했고, 이 외에도 동독도서관을 물질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서독의 도서 및 도서관비품구입센터(EKZ: Einkaufszentrale, 이하 EKZ)대표, 서독공공도서관사서협회 대표, Bertelsmann재단의

대표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 EKZ는 동독공공도서관에서 필요한 비품뿐만 아니라 중앙일간지 "Die Zeit", 공공도서관전문 학술지 "Buch und Bibliothek", 또 다른 신문과 학술잡지와 도서 등도 무료로 제공하고, EKZ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동독사서를 참여토록 독려했다(Stroscher 1990). 특히 ZIB는 동독공공도서관 장서의 보완을 위해 EKZ와 공동으로 "소급도서선정목록"을 작성했고, 독서후원재단과의 협력으로 "유럽도서주간"의 업무도 공동으로 수행했다. ZIB는 서독 대부분 대학출판물의 교환도 거의 무상으로 성사시켰다.

동독과 서독도서관간의 자매결연은 DBI와 ZIB의 협력의 산물이다. DBI, ZIB, 독일도서관협회(DBV)는 "시민도서기증운동"에 약 1000곳의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도록 촉구하여 한달 사이에 100개 도서관끼리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러한 운동을 위해 이 기관과 단체는 도서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언론보도문을 통해 홍보하고, 모금의 호소문의 "동서독도서관정보지"에 게재했다(Aktion 1990).

4.2.2 독일도서관협회(DBV)

동독과 서독의 도서관협회는 법적 통일 6개월 전부터 동독 측의 제의로 제휴를 시작하여 독일도서관협회/독일민주공화국(DBV/DDR)에서 독일도서관협회/동(DBV/Ost)로 명칭이 바뀌면서 통일 5개월 후인 1991년 3월 하나의 도서관협회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다. 두 도서관협회의 통합은 새로운 정관작성, 동서독이 맡아야 할 새로운 분담의 규정, 동독 임원의 추가로 4명의 집행부의 확장 등 세부적인 작업이 계속되었다. 새로운 DBV의 정관 제 8조의 공장

도서관과 기업체도서관, 병원도서관은 과거 동독이 노동자도서관에 특별히 비중을 두었던 전통에 따라 수용됐다. 통합된 DBV는 BDB에 가입하자마자 도서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촉구안을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관련 부서에 보내는 적극성을 보였다.

5. 동독공공도서관 진흥방안

통일 후 동독공공도서관의 촉진방안은 주로 공공도서관 장서의 혁신에 무게를 두고 진행됐다. 동독공공도서관은 서독공공도서관의 수서업무에 관한 정보도 부족했고 재원 역시 충분하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최신의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서독도서관 관련 단체들, 개인, 서독출판사, 자매결연도서관, EKZ, 독서후원재단, 도서관 관련 행정부서들의 지원을 이끌어 냈다. 이 외에도 사서 개인들간의 정보교환, 서독에서 주최하는 각종 도서관계의 세미나의 참석, 도서관 시설에 관한 도움도 빼놓을 수 없다.

5.1 동독공공도서관을 위한 재정지원

통일 직후 동독의 학술도서관은 그들의 발전을 위해 세계적 자동차회사 Volkswagen재단과 서독 연방교육부로부터 수백만 마르크의 지원을 받은 반면 공공도서관 대표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그들의 빈약한 재원에 관한 상황을 호소해야만 했다. 동독공공도서관은 그들의 장서를 최신자료와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9천만 마르크(약 540억원)가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이 중 5백만 마르크는 연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충당하기로 예정했다. 당시 BDB의 대변인 Mittler(Mittler 1990)는 동독공공도서관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서독시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1993년까지 동독 주민 당 적어도 한 권의 서방세계 도서를 동독공공도서관에 구비하도록 계획했다. 이러한 운동은 자율적인 시민연대운동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계획아래 지방자치단체의 시읍면은 그들 자치단체의 문화시설에 관한 재정이 빨라야 1993년에 재정자립을 이룰 수 있다고 예상하여 도시간 자매결연에서 동독의 문화사업을 위해 시작단계에 필요한 개시비용(start-up fund)을 연방정부에 요청했다(Staedte 1990).

연방정부의 첫 재정프로그램은 1991년부터야 동독공공도서관에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동독공공도서관은 다른 재원조달 방법을 고안해야만 했다. 그 방안으로는 서독의 자매결연도서관에서부터의 지원이었다. 또 다른 지원은 통일 훨씬 전부터 서독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하고있었던 동서독교류펀드와 동유럽펀드에서 나왔다.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함부르크시에서 동유럽을 위한 200만 마르크 프로그램과 같은 연구프로젝트에서 충당했다(Dankert 1990).

1991년 연방정부는 광범위한 동독문화촉진프로그램을 위해 9억만 마르크(5400억원)를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금액은 거의 위험수위에 처한 동독문화시설보조와 행사를 위한 인프라 프로그램지원금이었다. 이 금액은 문화인프라의 개선과 유지를 위해 1991년과 1992년에 나누어 집행됐다. 공공도서관은 대부분 이 인프라프로그램의 배당금에서 지원됐지만 수혜기관은 이

지원금의 51%를 자체에서 투자하는 조건이었다. 이 지원금은 동독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 도서관건물의 개보수, 이동문고, 도서관 직원과 이용자를 위한 홍보자료, 사서의 계속교육에 투입되었다(Bund 1993). 이 인프라프로그램은 또 공공도서관 장서의 혁신을 위해 EKZ와 ZIB의 도서선정리스트의 출판과 배포도 가능케 했다.

도서관 관련단체나 기관들은 계속해서 공공도서관발전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이들은 연방교육부가 거부했던 공공도서관촉진계획의 하나였던 30개의 이동문고의 운영을 연방내무부의 지역도시발전촉진프로그램에서 지원토록 성사시켰다. 이 자동차문고사업의 일환으로 동독을 순회하는 자동차문고에서는 46000권의 청소년아동도서전시회가 열렸다. 이 사업에서 단기적으로 50만 마르크는 연방청소년여성복지부의 청원으로 연방청소년프로그램에서 지원됐다. 이 동전시회가 끝난 후 이 장서는 공공도서관의 장서로 편입됐다(Meyer 1991).

1990년 ZIB와 DBI는 동독사서의 계속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 1992년에야 연방교육부는 1994년까지 지원했다. 공공도서관직원을 위한 재원으로는 연방정부의 공공도서관사서협회(VBB)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이 지원금은 동독의 새로운 주 단위의 공공도서관사서협회의 설립과 계속교육과정의 개설에 쓰여졌다(Taetigkeitsbericht 1992).

연방정부가 동독공공도서관의 인프라프로그램을 위해 1993년까지 지원한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하지만 특정 지역에 더 무게를 둔 점은 정치적 요소도 가미됐었다.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

통일된 후 서방세계의 과시용으로 동독과 인접한 폴란드나 체코국경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청소년문화시설과 도서관에 특별히 더 무게를 두었다(Kroetzsch 1993). 연방정부는 과거 동독정당이 서독에 상환해야 할 빚을 동독공공도서관에 사용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다. 1994 회계년 연방예산에는 더 이상의 공공도서관인프라지원은 책정되지 않았다.

1990년 BDB가 요청한 동독공공도서관을 위한 재원은 액정 그대로 지원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었고, 이 과정에서 도서관 관련 단체나 기관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원안이 너무 늦게 통과되거나, 혹은 적시에 통과되었더라도 해당 주정부의 업무지연으로 인해 효율적인 사업의 수행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Mohr 1992).

5.2 동독공공도서관의 장서혁신프로그램

5.2.1 도서관 장서개발을 위한 권고안

과거 동독공공도서관에서는 자료선정 시 항상 중앙에서 하달하는 구체적인 자료선정지침을 따라야 했다. 게다가 자료선정의 범위도 주로 출판시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동독에 한정되어 있었다. 동독사서들에게는 국경이 무너지자 서방세계의 자료에 대한 요구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러나 동독사서는 빈약한 재원과 서독공공도서관 수서 업무에 대한 정보부족에 직면했다. 특히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사서들은 장서선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통일 후 그들은 이들 장서의 혁신을 위해 기존 장서에 대폭적 변화를 단행해야 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서가에서 폐기되어야 할 폐기장서목록과

장서개발을 위한 새로운 보완자료리스트가 필요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동독의 자료를 극단적으로 폐기 처분하는데는 신중을 가했다. ZIB는 통일 이전인 1989년 12월 모든 공공도서관은 많은 양의 복본으로 쌓아둔 도서를 폐기 처분하라는 지침을 도서관에 보냈다. 그 외의 도서는 동독 역사를 고찰하는데 필요한 도큐먼트로서 다루어야 했다. 교과서는 내용으로 볼 때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지만 동독의 출판물을 불필요한 자료로 간주하는데는 자제를 했다(Brief 1990). 이러한 관점에서 도서관에서는 동독 출판물 중 계속 보관해야할 자료목록을 작성하게 됐다. 그 예로 Dresden시립도서관의 사서인 Schnabe는 1991년 보존의 가치가 있는 500권의 시집목록을 작성했다. 그는 이 리스트에 수록된 작품의 선정은 매우 주관적이며, 이 작품들은 동독의 특징을 잘 나타내면서도 동독에 대해 비판성이 강한 작품이라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이 목록은 Dresden시립도서관만을 위한 용도로도 작성했으나 Erfurt 일반학술도서관으로도 전해져 여기서는 수록된 작품을 계속 열람실에 배치하고 서고에서도 보관했다(Bewahrenswerte 1991).

동독공공도서관의 장서혁신에는 EKZ와 ZIB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EKZ와 ZIB는 공동으로 이를 위해 매우 포괄적인 권장도서목록을 작성했다. 1990년 전반, 즉 통일 이전에 이 두 단체는 동독공공도서관을 위해 미리 자료목록을 준비했다. 1987년과 1989년 사이의 작품으로서 입수가 가능하고 해제를 덧붙인 약 500종의 작품은 먼저 EKZ에서 "ekz Spezial DDR"란 목록으로 작성했다. 이와 동시에 통일에 대비해 ZIB도 과거 동독의 자료선정리스트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자료선정의 무대는 동독출판시장을 넘었고, 자료선정도 중소 규모 도서관에 무게를 두었다. 동독공공도서관의 지속적인 장서혁신을 위해 EKZ는 그들이 출판한 서평지 "북리뷰와 해제"를 1991년 말까지 동독의 모든 시립, 군립도서관에 기증했다.

EKZ와 ZIB는 동서독도서관전문가그룹의 도움을 받아 "동독공공도서관을 위한 소급장서의 선정"이란 프로젝트를 신청했지만 연방교육부의 승인은 받지 못했다. 그러나 도서관마다 소급도서의 선정에 필요한 목록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또 ZIB의 사서들이 이 문제에 관한 한 이미 주요한 부분을 처리해 놓은 상태여서 급한 대로 여기서 나온 결과만이라도 도서관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급권장도서목록의 인쇄와 배포는 연방정부 인프라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원됐다. 이 목록의 작성에는 재정상의 이유로 도서관의 수서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한 결과 목록의 분류도 동독분류표(KAB)를 상세하게 적용하지 못했고, 또한 선정자료 역시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서지사항으로만 처리했다. 북리뷰와 해제에는 수록된 3만종에서 4천 종이 선정됐다. 이 선정된 자료는 동독공공도서관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새로운 주제 분야였고 또 당시의 정보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었다. 3000종의 전문서적, 600종의 일반대중문학, 400종의 어린이도서가 선정됐고, 이러한 방법으로 제작된 3가지 권장도서목록은 모든 공공도서관에 배포됐다(Jonzeck 1991).

ZIB는 이 외에도 추가로 동독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을 위해 1990년 연속간행물과 신문시장, 참고도서나 여행안내서 시장을 조사하여 특별정보지를 발간했다. 또 ZIB는 라이프찌히와

Rostock의 시립지역도서관에 구축력은 없었지만 정치와 경제분야의 자료 중 서가에서 배제되어야 할 선별리스트를 보냈다(Arbeitshilfe 1991).

서독공공도서관은 그들의 동독파트너도서관이 자료선정에 있어서 과거의 명령 하달식으로 진행되던 틀에서 벗어나 자립을 하는데는 현금과 도서 및 비품의 기부뿐만 아니라 사서들의 서방세계에 대한 정보의 흐름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Rheinhessen-Pfalz시립도서관은 그들의 기본장서목록을 동독 Thuringen 지역 파트너도서관에 보냈다. 이에 덧붙여 6000마르크와 법률, 사회, 경제분야의 권장도서 목록과 추천도서목록도 작성해줬다. 이러한 권장도서목록들은 한 도서관에 머물지 않고 동독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고, 도서관에서는 이 목록은 근거로 직접 자료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목록에는 정기적으로 새로운 자료도 추가됐다.

DBI도 동독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에 참여했다. DBI는 법률, 경제, 역사, 컴퓨터분야의 장서개발을 위한 사서계속교육과정을 주최하여, 여기에 참가한 주제전문사서들에게 해당분야의 권장도서리스트를 작성해줬다. 또 DBI의 공공도서관위원회는 동독의 중소규모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1992년 “공공도서관 주요 참고서지”와 “공공도서관 연속간행물: 연속간행물기본장서목록”을 발간했다(Hoeveler 1993).

이 동독공공도서관을 위한 연속간행물권장목록은 공공도서관의 기본장서구입의 관점에서 보면 비판적인 면도 없지 않았다. 동독사서 Vogel은 거의 서방세계의 자료로만 채워진 이 권장리스트에 동독의 연속간행물도 추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동독에서 출판되는 20종의 연속간행물을 언급하면

서, 이 간행물은 동독시민의 정서에 맞는, 또 동독시민이 매우 즐겨보는 자료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여기에는 통일의 시대, 즉 혼란기에도 살아남은 정기간행물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평과 해제를 겸한 “동독신문과 연속간행물목록”을 동독의 시립도서관사서가 제작하기도 했다(Kreusel 1992).

5.2.2 기증에 의한 장서보완

통일을 전후로 동독도서관은 서독도서관의 장서기증이나 대여를 통해 폭발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했다. 1991년부터 서방세계의 자료에 대한 요구를 부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공공도서관에는 서독에서 보낸 포장된 도서상자를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동독도서관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기증도서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접하게 됐다. 흔히 동독공공도서관의 장서는 무조건 평가 절하되는 경향이었으며, 기증된 자료 중에는 도서관에서 쓸모 없는 자료도 허다했다. 그리하여 동독공공도서관은 구호품을 받는 빈민처럼 취급되고 있는 데에 대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또 무조건적인 수혜자의 입장을 탈피하기 위해 서독 측의 도서기증을 대가로 서독이 필요로 하는 여행안내서, 해당지역의 향토자료, 회색문헌과 같은 자료를 교환형식으로 보냈다. 이를 계기로 서독공공도서관에는 “동독문헌코너”가 생겼다(Sektion).

동독공공도서관을 위한 도서기증운동은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그 예로 “독일도서관 자매결연을 위한 시민의 도서기증운동”이다. 이 운동은 순수 시민의 쪽에서 시작했다. 문헌의 작가 Rauscheller가 이 운동을 시작하여 다른 작가

들이 참여하게됐다. 이 운동의 홍보를 위해 그는 당시 서독의 수도였던 Bonn시립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국민의 참여를 호소했다. 독서재단법인과 연방교육부장관의 지지표명으로 이 운동은 시민들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 운동의 구체적인 운영은 DBI, ZIB, DBV가 위임받았다. 기부된 도서는 인접한 공공도서관에서 우선 모았고, 여기서 각 파트너도서관에 보내졌다. 이를 계기로 1000개의 파트너도서관이 생겨났다. 이 운동이 시작된 후 100개의 자매결연 도서관이 그들의 성공사례를 보고했다. 이 성공사례의 내용은 순수 도서뿐만이 아니라 도서관간의 장기대여, 기부도서의 배분, 도서관의 기술적 보조도구와 비품의 기증도 포함됐었다. 이의 대가로 동독도서관은 그들 도서관과 도시에 관한 자료를 보내줬다.

이 첫 운동의 보완책으로 독서재단법인과 프랑크프르트시립도서관이 1990년 프랑크프르트 국제도서박람회를 계기로 "시민도서기부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에 ZIB는 다시 참여했고, 특히 이 운동은 재정지원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소규모 공공도서관을 겨냥했다(Goehler 1991). 2376개의 도서관과 도서관관련 시설이 1991년 3월부터 1994년 5월까지 이 운동을 통해 한번 이상의 도서를 기부 받았다. 이 운동에는 특히 대규모 출판사들(Bertelsmann, Suhrkamp, Fischer)의 참여가 눈에 두드러졌다. 이 운동에서 연방정부 내무부의 재정지원 은 기부도서를 위한 공간확보의 확장을 가능케 했다. 독서재단법인인 Rostock사무실에서는 연방정부 청소년여성장관도 도서 기부에 동참했고(Stiftung 1994) 또 이미 언급한 동독청소년 도서 이동전시회도 이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

었다. 이 이동전시회는 청소년도서출판사와 VBB, ZIB의 협력으로 이루어졌고, 이 운동에 필요한 홍보자료는 청소년문학모임 등록단체가 제공했다.

1990년 초 독일상공회의소장 Stihl과 Ludwig-Erhard재단은 독일기업연합회에게도 도서 기부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부된 도서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문제기금펀드"를 설립했고, 기금의 분배는 ZIB에서 담당했다(Buecherspende 1990).

동독공공도서관 장서의 보완방법에는 도서관 끼리의 복본교환도 있다. 동독 브란덴부르크의 주립정치교육센터 도서관과 서독 Nordrhein-Westfalen 주 정부 도서관은 그들의 복본을 교환하여 서로에게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고있다. 현재까지도 서독 30개 도서관이 위 정치교육센터 도서관으로부터 무료로 거의 반년마다 10종의 복본을 받고있으며, 6곳의 동독도서관은 위 주정부 도서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복본목록을 받고있다(Kraft 1993).

각 도서관의 기증도서의 출처와 사용에 있어서는 Thuringen주의 도서관을 예로 들 수 있다(Korrespondenz). Erfurt 지역할술도서관(Erfurt WAB)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선별적으로 개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았다. 1993년 이 도서관은 미군부대도서관의 장서를 기증 받기 전 기증 받을 장서를 조사하고 선별 한 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기증받은 영어자료는 특히 청소년 이용자들의 이용도가 매우 높았다. 이 외에도 기부단체로는 서독 Mainz시, 독서재단법인, 학술도서관협회, 연방정치교육센터, Ravensburg출판사 등이 있다. 기증도서들은 처음에는 유용하게 사용됐으나 얼마 되지

않아 너무 닳아져 폐기처분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또 기증도서 중에는 단지 폐지에 불과한 자료도 많았다. 그리하여 도서관에서는 기증도서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은 도서관도 생겨났다. Eisenbach시립도서관은 개인이 운영했던 Marburg언어학교로부터 대중소설이외에는 일체 다른 도서는 기부를 받지 않았다. Gotha의 Heinrich Heine도서관은 1990년 상당량의 기증을 받은 결과 이 도서관 이용율 85%는 Salzgitter자매결연도서관에서 기증한 도서에서 나타났다. Salzgitter도서관은 도서 이외에도 40.000마르크도 기부했으며, 이 기부금에는 개인, 자기출판작가, 지방 정당, 종교단체들이 동참했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자발적인 도서기부는 공공도서관에 큰 도움이 됐고, 그러한 도서의 이용률도 높았다. 또 서독도서관에서 폐기 처분한 도서에서도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도서관 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벌인 “시민도서기부운동”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기부도서 중에는 불필요하고 폐지에 불과한 자료가 15%나 되었다는 사실은 기부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5.3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도서수집

동독의 국경이 개방되기 이전부터 동독과 서독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했지만 도서관의 직접교류는 없었고, 혹 있었다면 자료교환 정도였다. 통일 후 도서관끼리의 자매결연은 “동서독 도서관정보지”의 광고란을 통해 동독도서관측에서 시작했고, 그 외의 교류는 먼저 시작한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이루어졌다.

BDB대변인 Mittler는 서독도서관이 그들의 동독파트너도서관에 도서기부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동독공공도서관과 자매결연을 맺은 서독공공도서관은 서독의 주간지, 지방일간지, 정기간행물의 구독을 대신 지불하고, 또 그들의 부담으로 서독의 출판물을 동독도서관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측 도서관들은 그들 파트너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서들 간의 교류도 적극 활용했다. 또한 양측 도서관끼리 그들 도서관에 관한 자료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그들 도서관의 업무를 읽히기 위해 사서들의 체류를 추진하고, 공동으로 계속교육프로그램을 계획, 수행했다.

Mittler는 양측의 도서관들이 그들 지방의 신문과 지역에 관한 자료의 교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서독도서관은 그들 파트너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했다. 파트너도서관의 정기간행물의 구독과 신간물을 위한 비용은 기증을 받은 도서 중에서 동독도서관에 적절하지 않은 도서를 판매하거나 또는 해당국의 지원금으로 충당했다. 동독도서관은 서독으로부터 장기간의 자료대여나 상호대차를 통해 그들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했다. 이러한 지원 이외에도 서독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업무에 필요한 자료, 도서관 비품, 장비 등도 기부를 했고, 자매도시와 도서관에 관한 전시회도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러한 파트너도서관끼리 다양하게 추진한 업무들에 관해서는 “동서독도서관정보지”를 통해서 발표됐고, 이러한 자매결연 도서관끼리의 활발한 활동에 관한 조사도 실시됐다(Baersch 1991). 그 결과 자매결연협력체에 대해서는 동독 측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했고, 자매결연은 꼭 필요한 방안이었다고 평가했

던 반면 서독공공도서관은 그들 도서관에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독 측의 이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동독 측에서 보내준 자료는 큰 성과였다고 했다. 그러나 자매결연협력체는 주로 동독공공도서관이 서독공공도서관에 적응해야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서독공공도서관은 동독공공도서관의 경험을 그들의 업무에 활용할 수가 없었다.

5.4 EKZ의 도서관지원(ekz-Hilfen 1990)

EKZ가 동독공공도서관의 지원하기 위한 주요 방법으로는 이미 언급한 소급장서개발을 위한 권장도서목록의 작성이었다. EKZ는 그들의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또 쉽게 도서관에 접근하기 위해 1990년 10월 통일이 되는 즉시 동독에 지부를 설립했다. 동독공공도서관분류표(KAB)는 DBI에서 개정을 한 후 1992년부터는 EKZ의 목록봉사부에 위임했다. 그리하여 1995년부터 EKZ는 동독공공도서관을 위한 서평지에는 이 분류표를 적용했고, 또 이 업무를 위해 특별히 EKZ-동독공공도서관 분류팀도 구성했다. 이 외에도 EKZ는 동독공공도서관 전산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EKZ는 동독공공도서관사서들에게 수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도서관전문센터에서 근무할 도서관업무 담당자를 위해 제공한 도서관장서개발과 도서관 장비에 관한 세미나는 매우 유용했다. 또 EKZ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내온 기증도서로 동독공공도서관의 자료혁신에 일조를 했고, 특히 그들이 발간한 “서평과 해제”를 무료로 동독공공도서관에 장기간 제공한

사실은 높이 살만 하다.

6. 동독과 서독의 사서자격증 단일화와 사서교육

1993년부터 동독공공도서관은 인건비의 삭감으로 도서관서비스가 위협을 받을 정도였지만 도서관이 폐쇄되는 사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소도시와 군 읍 면 단위의 소규모 도서관인력은 고용창출방안(ABM)에 의해 충원됐다. 이러한 인력은 그들의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도서관이 폐쇄되면 연쇄적으로 사서 실업자가 생겨났다. 이러한 구조조정과 실업자 문제는 동독과 서독의 고용시장 전반에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경이 개방된 후 도서관계에서는 동독사서들의 생존권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했다. 그 첫 단계로 동독과 서독의 사서자격증의 등가(等價)문제가 다루어졌다. 동독의 사서자격증이 서독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결국 동독의 사서교육에 새로운 구조 변화를 가져왔다.

6.1 동독과 서독 사서자격증의 등가(等價)

도서관 인사문제, 사서교육, 재교육, 계속교육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AG2는 통일 직후 동서독 사서자격증, 도큐멘타 자격증의 등가와 자격증 명칭의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다. 이 회의에서 “동서독 사서, 도큐멘타 자격증의 등가와 명칭의 단일화 방안에 관한 권고안”을 의결하기 위해 AG2는 이 안을 국가 AG 총회에 제출했다(Bibliotheksfachliche

1991). 이 권고안은 동독사서들의 생계와 관련 된 시급한 사안이었다. 이 안은 각 주의 교육부장관 전담심의회에서 동독사서의 임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이 안의 제작을 위해 전문위원들은 동독의 사서교육, 사서교육기관의 구조, 도서관업무의 총괄적 분석, 동서독사서의 업무분야를 비교 분석했다. 이 결의안에서는 1991년부터 시작하는 동독의 모든 사서양성기관(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을 다루었고, 그 중에서도 정사서에 더 비중을 두었다. 이 교육기관의 학위평가는 서독의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동독의 정사서는 다시 서독의 학제에 따른 동등한 자격증을 취득해야했다. 이를 위해 이 결의안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그 첫째는 졸업 후에 정사서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도서관 실무 경력 3년을 증명하는 사서들이 선택할 수 있었다. 각 주정부 교육부의 해당 부서는 자격증 인정서류를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또 신청기한도 무기한으로 하여 통일을 전후로 실무경력3년이 되지 않은 동독사서는 언제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의 사서들은 이 방법으로 서독사서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못한 사서들은 두 번째 방법을 택했다. 즉 실직으로 3년의 실무경력을 채우지 못한 사서들이나, 사서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른 분야에 종사했던 사서 또는 교육과정 동안 휴학을 했던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됐다. 이 두 번째 방법은 1년의 추가교육을 받은 후 자격시험에 응시하도록 조치를 취했다(Werner 1992). AG2는 추가교육기관으로 라이프찌히의 기술경제문화전문대학의 도서관, 박물관과를 지

정했다.

이렇게 취득한 동독사서의 서독정사서자격증은 동독과 서독의 사서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동서독 모든 주에서 인정했다. 이 결의안에는 사서의 명칭도 단일화했다. 사서 명칭의 단일화는 특히 준사서에서 이루어졌다. 동독에서는 준사서를 도서관전문노동자(Bibliotheksfacharbeiter)라고 칭했으나 이 안에서는 서독의 준사서(Bibliothekssasistent)로 통일했다. 그 결과 동독사서는 서독의 공무원임급여표(BAT)에 제대로 등급이 매겨지지 않아 발생한 물질적 피해는 제거될 수 있었다. 사서의 급여체계에 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미 1991년 3월 “공공도서관 사서를 위한 공무원급여표의 보수체계에 관한 지시사항”을 AG1과 BDB가 동독의 모든 공공도서관과 문화부에 보냈다(Paulweit 1991). 이 지시사항에 따르면 동독사서급여는 서독사서급여의 분류방식에 따라 1992년 3월까지의 서독사서의 60%로 책정되었다. Erfurt WAB의 자료에 의하면 1995년 말 동독사서의 임금은 서독의 82%까지 상향 조정되었다. 물론 통일 초기 잘못된 급여체계에 대해 정정할 수는 있었다지만 노동법상으로는 어떠한 청구권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BAT 1991). 이러한 상황에서 동독사서들은 그들의 급여에 대한 문제제기를 자주 했다. 그들은 그들의 급여가 동독의 평균임금보다 더 낮게 책정되었고, 또한 이러한 임금협정에 대한 어떠한 보완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호소문을 과거 동독 교육부에 보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1990년 2월 각료평의회(Ministerat)결의안에서 치우개선이 누락된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동독공무원노조에 도서관전문가협회의는 있

었으나 통일을 전후로 국가 전체의 행정 조직개편의 와중에는 임금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지방관청의 경영자단체연합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정부 교육부장관은 그의 답변에서 “도서관을 폐쇄시키는 위험부담을 안고있는 것 보다 물과 빵으로 가뭄시기를 극복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동독사서들에게 안내해줄 것을 권하였고, 그 결과 사서들의 요구는 묵살됐다. (DDR-Bibliothekar 1990).

6.2 사서교육과 계속교육

동독의 고급전문사서와 정사서 교육은 동베를린과 라이프찌히의 대학과 3년제 전문대학에서, 도서관 전문노동자인 준사서는 Sonderhausen의 사서교육학교에서 이루어졌다. 통일 후 이 사서교육기관의 교육자들은 교과과정의 내용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쟁점은 사서교육에서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과감히 털어 버리는 것, 두 번째는 교과목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이었다. 교과목의 재조정에는 서독의 교육현장과 경험을 이정표로 삼았지만 동독의 경험도 고려했다. 그러나 커리큘럼에서 사라진 이데올로기 관련과목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동독사서교육 개혁은 AG2의 권고안에서부터 시작했고, 이 권고안에는 DBV의 제7분과위원회, 사서교육기관회의, 도서관사서협회가 동참했다.

라이프찌히 정사서교육기관은 1914년 설립된 독일의 첫 번째 사서양성기관이다. 출판역사를 거슬러 볼 때 라이프찌히는 그 당시 국제도서박람회를 개최한 도시로서 출판과 깊은 연원으로 1957년 출판전문대학이 설립됐다. 1985년 사서

양성교육기관은 사서, 출판전문대학으로 합병됐고, 통일 후 사서교육개혁을 단행하면서 여기에 1954년 설립된 동서독 유일의 박물관전문대학이 합병되어 도서관학, 출판학, 박물관학으로 확장되었다. 그리하여 이 세 분야는 통일 후 새로 설립된 기술, 경제, 문화대학(Hochschule fuer Technik, Wirtschaft und Kultur, Leipzig FH-HTWK)에 포함되어 새로이 탄생했다(Werner 1992). 이 새로운 사서교육은 교육연한도 과거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다. 이 확장된 사서교육과정의 특징은 동서독 특유의 공공도서관사서와 학술도서관사서의 구분을 없애고 3.4 학기부터는 두 사서그룹이 공통과목을 이수하도록 했다. 최근 국제적 추세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공공도서관과 학술도서관의 분사에도 점차 구별이 희미해지는 추세고, 또한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의 정보봉사에도 자료의 테이타베이스화와 디지털화로 인해 봉사의 한계도 없어지고 있다. 이 라이프찌히 사서교육개혁과 유럽 통합을 계기로 서독의 정사서 교육기관에도 유럽 수준과 세계적 수준에 상응하는 사서교육을 위해 3년제 전문대학 정사서과정이 4년제 대학에 흡수시키는 주(州)가 생겨나고 있다. 독일은 매우 분명한 지방자치제도로 인해 각 주의 문화자치권도 매우 엄격하여 이러한 교육기관도 주립법에서 따로 다루지만 2000년 들어와서는 대부분의 주에서도 유럽과 국제수준에 맞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 3년제 교육과정을 수료한 라이프찌히 정사서들은 교육과정이 4년제로 개편됨에 따라 동등한 자격증을 위해서는 1년을 통선교육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창치를 마련해줬다.

라이프찌히는 통일 후 급변하는 환경에서 과

감히 정사서교육에 대한 개혁을 단행했으나 이에 비해 베를린에서는 아직까지 거의 과거의 상태 그대로이다. 베를린에는 과거 베를린시 자체가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으로 분단되었기 때문에 대학도 동베를린에는 훔볼트대학과 서베를린에는 자유대학이 병행하고 있다. 이 두 대학에는 문헌정보학과가 학부과정에서 박사과정까지 개설되어있다. 이 두 대학은 통일 후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 베를린 주립고등교육구조조정위원회와 AG2는 서베를린 자유대학의 문헌정보학과가 동독의 훔볼트대학에 흡수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Werner 1992).

대학의 학부과정 이외에도 동서베를린에는 공공도서관정사서와 학술도서관정사서를 위한 3년 과정의 전문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정사서교육기관도 대학처럼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일치하고 있다. 위의 두 교육기관 이외에도 통일 후 아카이브, 도서관, 도큐멘타 교육을 위한 전문대학이 포츠담(Potsdam)에 신설됐다.

통일 후 사서들의(Bund 1993) 계속교육과 관련해서 AG2는 “도서관 계속교육에 관한 권고안”을 1991년 11월에 내놓았다(Bund 1993). 특히 통일 후 동독사서들의 계속교육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DBI는 위 권고안을 실무에 옮겼다. 통일 직후 동독에서는 새로운 사서교육기관, 도서관 전문단체와 협회가 아직 정착된 상태가 아니고 또 ZIB와 MZ도 DBI에 흡수 합병되는 과정에 처한 상황에서 동독사서의 계속교육 문제는 DBI에 위임되었다. DBI는 연방정부 교육부에 3년 간의 계속교육프로젝트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프로젝트의 내용은 주로 새로

운 도서관 장서개발에 관한 세미나, 도서관 산화 네트워크, 도서관 건축과 개축, 도서관 마케팅, 비품관리, 인사관리, 도서관 후원금제도, 도서관의 다목적 문화교실의 운영, 청소년 도서관서비스, 도서관 홍보활동 등이다(Schmidt 1992). 계속교육과정에 필요한 재원은 연방교육부에서 먼저 1992~1994년 분을 통과시켰다. 1992년에는 49회, 1993년에는 93회의 계속교육세미나를 DBI에서 주최했고, 이 과정에는 2300명의 사서들이 참여했다. 이 모든 계속교육세미나는 AG2에서 권장한대로 DBI(Arbeitsbericht 1994)가 사서협회, 사서교육기관 협회, 새로운 도서관전문센터가 협력하여 조직하고 추진했다. EKZ도 동독사서의 계속교육을 위해 수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했고, 그에 따른 서비스도 제공했다.

동독사서를 위한 세미나는 공공도서관사서협회(VBB)에서도 개최했다(Fortbildungs 1990). VBB가 이미 1990년 라이프찌히 전문대학과 함께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동독공공도서관사서들에게 서독공공도서관의 발전상황과 업무방법, 청소년서비스를 알렸다. VBB는 베르텔스만재단과 Guetersloh시립도서관과 협력하여 동독공공도서관 지도자급사서를 위한 세미나도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동독사서들이 서독공공도서관에서 실습하는 과정도 계획했다(Stabrodt 1992). 사서의 계속교육은 여기에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사서들의 계속교육은 재정을 지원해준 연방정부교육부와 도서관단체나 협회가 통일을 전후로 추진한 도서관촉진방안의 결실이다.

7. 결론 및 제언

동독이 자부심을 가지고 중앙집중체제로 운영, 관리하던 동독공공도서관시스템이 와해위기를 맞았다. 흡수통일이라는 명제 하에 동독공공도서관은 강력한 지방자치제의 서독공공도서관시스템에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필요로 했다. 이때 발생한 제반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동서독교육위원회 상하 동서독도서관전문가그룹이 결성됐다. 그 후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국가AG이 도서관전문가그룹의 업무를 이어받고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 도서관 문제를 6개 분야의 AG로 나누었다. 6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업무에 착수하여 다양한 권고안들을 발표하고 촉진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권고안과 촉진책들에는 동독공공도서관의 구조변화, 재정, 장서의 혁신, 사서교육 등등 동독공공도서관 전반에 관한 문제들이 다루어졌다.

동독공공도서관의 촉진 정책을 통해서 동서독 공공도서관시스템의 통합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도서관 관련연구기관과 단체들이 그들의 활동영역을 명확하게 결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재정지원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동독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도서관계의 지속적인 호소와 발전안은 그들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증가에서 나타났다. 특히 과거 동독공공도서관 장서의 35~40%정도를 과감히 폐기처분하여 장서내용의 혁신을 단행한

결과 그동안 서방세계의 자료에 목말라있던 이용자의 요구, 체제변화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자료요구, 새로운 직업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요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

동서독 도서관 연구기관의 통합은 쉽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이루어졌고, 동서독의 도서관협회의 통합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동서독사서자격증의 등가에 관한 문제는 동독의 자격증이 서독사서자격증의 기준에 따랐다. 통일 직후 동독사서의 급여는 서독의 60% 수준에 머물렀으나 1994년에는 84%까지 점진적으로 평등화 되어갔다.

통일을 계기로 동독의 공공도서관과 학술도서관의 정사서 교육과정이 통합되었고, 또 교육연한도 유럽 수준과 국제적 수준에 걸맞게 4년으로 연장되는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서독의 사서교육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동독과 서독의 공공도서관 통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할 점은 남북한의 공공도서관이 합병이든 흡수든 어떠한 형태로든 통합을 이룰 경우 서로의 시스템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조건 우리의 공공도서관시스템이 북한의 공공도서관시스템보다 더 좋다는 우월 의식은 피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북한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남북한의 공공도서관시스템을 비교하여 경쟁의식을 불러일으켜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공공도서관은 선진국에 비하여 너무나도 미흡한 점이 많고 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Aktion Buerger spenden Buecher-fuer die deutsche Bibliothekspartner-schaft. 1990 *Bibliotheksinforma-tion Ost-West*. 1(4): 2.
- Arbeitsbericht 1990-91: Aufgaben und Taetigkeiten des Deutschen Bib-liotheksinstitut. 1994. Berlin. DBI.
- Arbeitshilfen fuer den Bestandaufbau und Bestandsichtung. 1991. *Bib-liotheksInfo*. 1(1): 27.
- Baersch, U. 1991. Entstehung und Bedeutung von deutsch-deuts-chen Bibliothekspartnerschaften Oeffentlicher Bibliotheken an-h-and ausgewaehlter Beispiel. Ha-mburg. (Diplom Arbeit)
- BAT-Verguetung in den neuen Bun-deslaendern. 1991. *BuB*. 43(9): 723-725.
- Berliner Memorandum. 1990. *ZfBB*. 37(4): 357-358
- Bewahrenswerte DDR-Literatur: em-pfehlende Titelliste, erarb. von Manfred Schnabel. 1991. Dres-den.
- Beyersdorff, G. 1993. Das Deutsche Bibliotheksinstitut 1992: neue Aufgaben, neue Strukturen. *ZfBB. Sondeh*. 55: 104-109.
- Bibliotheksfachliche Stellungnahme zur Gleichstellung von biblioth-ekarischen und dokumentari-schen Berufsabschluessen aus der ehemaligen DDR und zur Aequivalenz von Berufsbezei-chnungen. Empfehlungen zur Foerderung der Bibliotheken in den neuen Bundeslaendern. 1991. Berlin. DBI.
- BR(D)DR + ekz. *ekz-report*. 1990: 1-4(o.S)
- Brief des Zentralinstituts fuer Bib-liothekswesen an die Direktoren und Leiter der StAB. 1990. *Der Bibliothekar*. 44(1): 35.
- BuecherspeOsnde Grundlagenliteratur zur Sozialen Marktwirtschaft. 1990. *Bibliotheksinformation Ost-West*. 1(5): 10-11.
- Burhfeind, A. 1990. Derzeit herrscht "Vakuum", Boersenblatt 77.25 September, p. 2908-2909
- Bund-Laender-Arbeitsgruppe Biblio-thekswesen: Abschlussbericht 1990-1992: Empfehlungen und Materialien. 1993. DBI. (DBI-Materialien:126)
- Dankert, B. 1990. Expertengruppe Bibliotheken: zur Zukunft des Bibliothekswesen in einem vere-inten Deutschland, *BuB*. 42(8): 596-597

- Dankert, B. 1990. Wir und die neue DDR, *BuB*. 42(3): 205.
- DDR-Bibliothekare sind sauer: Gehalt: rund 850 Mark brutto, 1990. *BuB*. 42(9): 699-700.
- Deutscher Staedtetag zur kommunalen Kulturpolitik, 1990. *Bibliotheksinformation Ost-West*. 1(2): 2.
- Dietle, C. 1990. Bibliotheken in der DDR. *die buecherei*. 34(2): 213-215.
- Dietze, J. 1993. Die Wirkung der Bund-Laender-Arbeitsgruppe Bibliothekswesen- eine "Bilanz" aus persoenerlicher Sicht. *ZfBB*. 40(2): 135-145.
- Einigungsvertrag-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e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1990. Bonn.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 ekz-Hilfen fuer den Bestandsaufbau von oeffentlichen Bibliotheken in der DDR. 1990. *Bibliotheksinformation Ost-West*. 1(3): 9.
- Empfehlungen zur Foerderung der Bibliotheken in den neuen Bundeslaendern/Bund-Laender-Arbeitsgruppe Bibliothekswesen. 1991. Berlin. (DBI-Materialien: 106) DBI.
- Erweitert Informationen zum erweiterten Deutschen Bibliotheksinstitut. 1992. *Bibliotheksdienst*. 26(2): 179-184.
- Expertengruppe "Bibliothekswesen" der deutsch-deutschen Bildungskommission: Kurzeempfehlungen fuer das Bibliothekswesen in den neuen Laendern. 1990. *Bibliotheksinformation Ost-West*. 1(7): 2-8.
- Goehler, H. 1991. Buchspenden fuer kleine hauptberufliche geleitete Oeffentliche Bibliotheken. *BibliotheksInfo*. 1(6): 379.
- Gpoebler, H. 1990. Werben durch Angebot.. *Der Bibliothekar*. 44(8): 449-454.
- Guennel, P. 1992. AG 1 der Bund-Laender-Arbeitsgruppe bib. iothekswesen tagte in Gotha. *BibliotheksInfo*. 2(6): 420-421.
- Guennel, P. 1993. Oeffentliche Bibliothek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0-1992- eine Uebersicht-. *Bibliotheksdi- enst*. 27(12): 1874-1882.
- Heoppner, M. 1990. Endlich wieder richtig lesen koennen. *BuB*. 42(2): 149-150.
- Huebner, G. 1993. Eine Bibliotheks-

- landschaft veraendert sich. *BibliotheksInfo*. 3(7): 480-482.
- Huebner, G. 1990. Staatliche Allgemeinbibliotheken in Umwandlung zu kommunalen oeffentlichen Bibliotheken. *Der Bibliothekar*. 44(9): 518-522.
- Jahresbericht der Abteilung Erwerbung/Erschliessung 1990 der WAB(B) Erfurt.
- Jinas, G. 1990. 10.000 Rowohlt-Buecher fuer 100 Bibliotheken in den neuen Bundeslaendern. *BibliotheksInfo*. 1(3): 167-168.
- Jonzeck, M. 1991. Literaturempfehlungen zur Bestanderneuerung in den Oeffentlichen Bibliotheken der neuen Bundeslander. *BibliotheksInfo*. 1(3): 180-181.
- Klinger, H. 1990. Ueberblick ueber das bibliothekswesen der DDR. *Bibliotheksdienst*: 24(8): 1056-1062.
- Klut, B. 1993. Mecklenburg-Vorpommern: vorerst nur Fachstellen-Beauftragte. *BibliotheksInfo*. 3(6): 444-445.
- Kraft, J. 1993. Brandenburgische La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unterstuetzt Bestandserneuerung. *BibliotheksInfo*. 3(11): 789-790I.
- Kraft, J. 1993. Regionalgesoraechе zur Kulturstruktur in den neuen Grosskreisen des Landes Brandenburg. *BuB*. 45(9): 786-787.
- Kreusel, G. 1992. Zeitung und Zeitschriften aus den neuen Bundeslaendern. *BuB*. 44(10/11): 973-980.
- Kroetzsch, J. 1993. Tagung der neuen Fachstellen im DBI. *BibliotheksInfo*. 3(1): 60-62.
- Kuhlmann, H.J. 1991-1994. BDB-Plattform "Oeffentliches Bibliothekswesen" *Bibliotheksdienst*. 25(7): 985. 26(5): 617-618. 26(9): 1323-1324. 28(5): 621-622.
- Mahrt-Thomsen, A. 1990. West-Berliner bibliotheken: der Nachhohlbedarf der DDR-Buerger ist enorm. *BuB*. 41(4): 312-313.
- Marks, E. 1987. Die Entwicklung des Bibliothekswesen der DDR. Leipzig. Bibliographisches Institut.
- Maewinski, K. 1990. Zur Entwicklung und zum Stand des Bibliothekswesens in der DDR. *Bibliotheksdienst*. 24(7): 890-899.
- Meyer, F. 1990. 46.000 westdeutsche Kinder- und Jugendbuecher fuer die neuen Bundelaender. *BibliotheksInfo*. 1(1): 21-22.
- Mittler, E. 1990. Dringend benoetigt: die Buechermark fuer die neuen

- Buerg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ibliotheksdienst*. 24(12): 1623.
- Mittler, E. 1990. Ein weiterer Schritt zur Zusammenarbeit: Gesprach mit dem Bibliotheksverband der DDR. *Bibliotheksdienst*. 24(2): 149-151.
- Mohr, G. 1990. Mecklenburg-Vorpommern: Fahrbibliotheken - ein Irrlicht am Ende des Tunnels. *BuB*. 44(6/7): 1000-1001.
- Pauweit, K. 1991. BAT in den neuen Bundeslaendern. *Bibliotheksdienst*. 25(8): 1165.
- Schmidt, M. 1990. Fortbildungsoffensive fuer die neuen Bundeslaender. *BibliotheksInfo*. 2(11): 748-749.
- Siegl, E.A. 1990. Zur notwendigen Strukturreform der Oeffentlichen Bibliotheken in der ehemaligen DDR. *Bibliotheksdienst*. 24(10): 1365-1369.
- Staedte fordern Bundesfinanzhilfe fuer die Kultur in der DDR. 1990. *BuB*. 42(9): 700-701.
- Stiftung Lesen: 3. Taetigkeitsbericht Mai 1994.
- Stroscher, N. 1990. Engere Kooperation mit BRD-Partnern. *Der Bibliothekar*. 44(3): 173-174.
- Taetigkeitsbericht des VBB-Vorstandes Juni 1991 bis Februar 1992. 1992. *BuB*. 44(5): 466-479.
- Usemann-Keller, U. 1990. Deutsches Expertenkolloquium "Bibliotheken" in Berlin. *Bibliotheksdienst*. 24(7): 920-922.
- Was tut sich bei den Oeffentlichen Bibliotheken?. 1992. *Bibliotheksdienst*. 26(6): 869-880.
- Werner, R. 1992. Arerkennung von Bildungsabschluessen der ehemaligen DDR fuer Berufe im Bibliotheks- und Informationswesen. *Bibliotheksdienst*. 26(3): 337-343.
- Werner, R. Berufs- und Ausbildungssituation in den neuen Bundeslaendern. *Bibliotheksdienst* 26(1992) 10: 1525-1533.
- Werner, R. 1992. Bibliothekarische und dikumentarische Ausbildung in den neuen Bundeslaendern. *ZfBB Sondeh*. 54: 280-281.